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기수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국제통상전공

최 선 길

최선길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일

主 審 經濟學博士 李 丙 根 ㉠

委 員 經營學博士 崔 淳 權 ㉠

委 員 經濟學博士 金 基 洙 ㉠

목 차

제 I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3 절 선행 연구의 검토	3
제 II 장 한·일간의 무역 현황 및 관련정책 비교	5
제 1 절 한·일간의 무역 실태 및 문제점	5
1. 한·일 무역의 규모와 추이	6
2. 한·일 교역 의존도	15
3. 대일 의존적 산업 구조	16
제 2 절 한·일간의 산업 정책 비교	17
1. 한국의 산업정책	18
2. 일본의 산업정책	20
제 3 절 한·일간의 무역 정책 비교	24
1. 한국의 무역 정책	24
2. 일본의 무역정책	26
제 III 장 한·일간의 무역 불균형의 원인 분석	31
제 1 절 한·일 무역 불균형의 원인	31
1. 산업구조상의 요인	31
2. 자본 및 기술 도입의 대일 편중	34
3. 일본 시장의 무역 장벽	36
제 2 절 한·일간 무역 및 산업 정책이 대일 무역 역조에 미치는 시사점	47
제 IV 장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방안	49

제 1 절	산업·기술분야의 개선	49
1.	대일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	49
2.	기술 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 방안 강화	51
3.	수출상품의 고급화·다양화	53
4.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54
5.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 정책	55
제 2 절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59
1.	불안요인의 적극적 해소	59
2.	시스템 혁신으로 국가 전반을 업그레이드	60
3.	무역 인프라 구축	61
4.	대일 수출 마케팅 활동 강화	62
제 3 절	엔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적응력 강화	63
제 4 절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확대	66
1.	한·일 FTA 추진	66
2.	APEC내의 협력 확대	68
3.	교역확대와 기술협력 촉진	70
제 5 절	기타 대책 방안	71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책	71
2.	문화상품 등의 수출 확대방안	73
3.	일본 유통업체와의 제휴	74
4.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시장개척	76
제 V 장	결 론	77
	참고 문헌	79
	ABSTRACT	81

표 차 례

<표 1> 우리나라의 대일 대세계 수출입 현황	7
<표 2>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역조 추이	8
<표 3>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입 비중(순위) 추이	8
<표 4>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 추이	9
<표 5>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의 변화 추이	10
<표 6>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대일 무역수지 추이	11
<표 7>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일 수출	12
<표 8>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일 수입	13
<표 9>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 추이	14
<표 10> 한국 무역의 지역별 구성	16
<표 11> 한국과 일본의 관세 및 교역(20개 부문)	38
<표 12>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43
<표 13>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비관세 장벽	44
<표 14> 한·일간 일반기계산업의 기술수준 비교	51
<표 15> 1986-1991년간 국산화에 따른 부문별 교역개선 효과	53
<표 16> 일본시장에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54
<표 17> GDP대비 연구개발비	56
<표 18> 1인당 연구 개발투자금액	57
<표 19> 보유중인 특허권수	57
<표 20> 21세기 일본이 버릴 기술과 살릴 기술	59
<표 2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68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경제성장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무역면에서도 2002년에는 연간 무역 거래액이 3,140억 달러에 달해 무역 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¹⁾

그러나 무역 수지면에서는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전체 무역수지는 1999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무역 거래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일 무역의 경우 계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는 1994년 118억 달러로 1백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2000년 113억 달러, 2001년 101억 달러, 2002년 14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일본 외 지역의 무역흑자가 250.4억 달러였지만 대일 무역적자가 147억 달러를 기록하여 심각한 대일무역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일본으로부터 수입수요를 유발시켜 극심한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방치한 채 국제 수지균형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구미 등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역간의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방치한 채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미국 유럽 등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

1) 2003.9 삼성경제 연구소 경제동향 Brief 제333호 p30

역수지 흑자를 확대시켜야 하므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각종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 지역국가들의 경기변동 및 무역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수출의 안정적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WTO 체제하에서 세계경제 추세는 지역 블록화로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상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거래의 균형적 증대를 토대로 국제수지 균형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재의 국내 자급도가 낮아 수출증대가 바로 수입확대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 역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대일 무역 역조가 우리나라 국제 수지 균형 내지는 경제 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역조현상의 원인을 찾고 나아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료 및 참고문헌을 활용하고, 각종 정기 간행물 및 통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가급적 국내외 유수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시간이 많이 경과한 논문, 자료 등은 배제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8년 간의 범위를 중심으로 대일 무역구조 및 대일 무역역조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서술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제 2 장은 한일 무역의 현황과 관련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제 3 장은 한·일간의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으며, 제 4 장은 전장에서 논한 대일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5 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 연구의 검토

최근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대중국무역에 관심이 많이 쏠린 탓에 대일 무역역조에 관한 연구가 다소 적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은 최근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3년 8월 현재 수출은 1,199.7 억 달러, 수입은 1,142.6억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가 57.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대일 무역만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²⁾ 대일무역의 적자의 시정이 우리나라 무역 성장의 관건임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경한(1995)은 대일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산업 및 무역구조가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계류, 부품, 소재 등의 대일수입 비중이 큰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격 및 품질저하에 따른 국제 경쟁력 약화, 일본의 각종관세, 비관세장벽과 일본의 외국인 투자억제 정책 등을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역조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일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통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들고 있다. 이기호(2000)는 기술력 향상을 통해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 개발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대일 무역 흑자국인 중국의 사례를 집중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부가 가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인터넷 등 유망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인교(2001)는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에서 한·일 FTA의 체결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중장기적인 대일무역의 긍정적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허찬국(2002)은 「해법 없는 일본경제가 주는 교훈」에서 향후 5년 이상에 걸쳐 일본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향후 사업계획에서 일본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편

2) 경향신문.2003년 9월 26일자

이 바람직하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향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도의 기술개발과 자본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우량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체질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일본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경영자원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일등상품의 개발에 주력하면 대일 역조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진(2003)은 삼성경제연구소 발행 「일본기업 재도약의 가능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감각을 가진 CEO 또는 CEO 시스템을 양성하여, 새로운 전략으로 재도약하는 일본 기업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 한·일간의 무역 현황 및 관련정책 비교

제 1 절 한·일간의 무역 실태 및 문제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급속한 확대 일로에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제 2 무역 상대국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지향적인 경제 개발계획과 수출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양국간의 교역량은 대폭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이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로 발전하여 마침내 시정키 어려운 대일무역 적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한 경제 협력이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1960~1969년 기간 중 대일 수출은 5억 달러, 수입은 28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2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1979년 145억 달러, 1980~1989년에는 3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일 무역 적자액의 규모가 커서 일본을 제외한 여타국에 대해서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 적자액이 이를 상회하여 전체 무역수지는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수지 적자는 156억 달러를 나타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적자 규모는, 199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의 기본적인 원인이 대일무역 적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5년 이후 2002년까지의 대일 무역적자 총액은 1873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³⁾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국가간의 무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와중에서도 일본의 무역성장은 지속되어 왔다. 일본의 무역은 내용적으로는 약간의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무역흑자를 실현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도 그 동안 적극적인 무역 진흥정책에 힘입어 수출이 지속적으로

3) 산업자원부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2003년, 4월 p 21,
이기호 「우리 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2000년 8월 p1

증가해 왔으며, 세계 무역의 시장점유율이 세계 11위권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수출이 호조를 띠고 대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일 무역 역조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9년에 전체수출의 9.7%, 수입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9년 일본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은 5.6%, 수입은 5.0%에 불과하다. 최근의 대일 무역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1996년까지 증가되었던 대일교역량이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1999년 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대일 수입이 1998년에 비해 30.2% 증가하고, 대일수출은 15.3%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1999년 대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국내 경기 회복의 가시화, 수입선다변화 해제,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호조에 따른 관련 부품 수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일 수출이 우리나라 1999년 총수출 증가율(9%)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일본의 경기회복과 최근의 엔화강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품목들을 보면 그간 주로 원료나 경공업제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전기·전자제품 등 기술집약형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입면에서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해 대일 자본재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한·일 무역의 규모와 추이

(1) 한·일간 무역 규모

한국의 대일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규모를 보면 1997년에 130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46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1999년에는 83억 달러, 2000년 114억 달러, 2001년 101억 달러, 2002년 14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1998년에 적자폭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원

화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자재, 핵심부품 등의 수입원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결과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우리나라의 대일 대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대일			대세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1998	12,238	16,840	-4,602	132,313	93,282	39,031
1999	15,862	24,142	-8,280	143,685	119,752	23,933
2000	20,466	31,828	-11,362	172,268	160,481	11,787
2001	16,506	26,633	-10,127	150,439	141,098	9,341
2002	15,143	29,856	-14,713	162,471	152,126	10,345
2003년 1-7월	8,930	18,713	-9,783	104,551	100,758	3,793

자료:삼성경제 연구소 「경제동향 Brief 제327호」 2003.7

(2) 한·일 무역의 추이

가. 韓-日 교역의 주요 특징

<표1>과<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규모는 1996년 2,800억 달러, 2000년 3,327억 달러, 2001년 2,915억 달러 2002년 3,146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일 적자도 유사한 속도로 늘어 나고 있으며, 1996년에는 156억 달러로 사상 최고의 대일 적자를 기록하였고, 1997년IMF를 고비로 적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1999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역조 추이

(단위 : 억 달러)

	'80	'85	'90	'95	'96	'00	'01	'02
전체 교역규모	398	614	1,349	2,602	2,801	3,327	2,915	3,146
대일적자	28.1	30.1	59.3	155.5	156.8	113.6	101.2	147.1

자료: 산업자원부 「최근 對日 교역패턴의 변화 및 일본시장 내 우리 수출의 경쟁관계 분석」 2003.1 p1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로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이 상쇄되고 있어 전체 지역의 균형적인 무역을 위해서도 대일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 <표 1>과 <표 2>의 2002년 수출입 현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외 지역의 무역흑자 250.4억 달러인 데 비해, 대일 무역적자 147억불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흑자가 103.4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보아도 대일 무역역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입 비중(순위) 추이(% , 억 달러)

	'80	'85	'90	'95	'02	'03(1-5)
수출	17.4(2위)	15.0(2위)	19.4(2위)	13.6(2위)	9.3(3위)	9.2(3위)
수입	26.3(1위)	24.3(1위)	26.6(1위)	24.1(1위)	19.6(1위)	19.5(1위)

자료: 산업자원부 「최근 對日 교역패턴의 변화 및 일본시장 내 우리 수출의 경쟁관계 분석」 2003.1 p2

<표 3>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1980년 이래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수출비중의 순위는 2위에서 최근 3위로 떨어졌다. 비중면에서도 수입에 비해 수출의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면 대일 무역수지가 심화되어 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이룬다해도 대일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 수지 효과의 상당부분을 상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90년 이후 韓-日 교역패턴의 변화

<표 4>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구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 추이(MTI 3단위 기준)

수출	1990		1995		2000		2002		2003(1-5)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의류	18.6	반도체	16.6	석유제품	17.8	반도체	17.2	석유제품	20.4
2	반도체	9.6	의류	10.4	반도체	15.5	석유제품	15.8	반도체	15.6
3	철강판	7.5	철강판	8.0	컴퓨터	11.5	컴퓨터	7.1	컴퓨터	4.9
4	석유제품	3.7	석유제품	5.2	의류	5.0	의류	3.7	철강판	3.6
5	신발	3.4	영상기기	2.9	철강판	4.8	철강판	3.2	영상기기	2.9
계		42.9		43.0		54.5		46.9		47.3

자료: 산업자원부 「최근 對日 교역패턴의 변화 및 일본시장 내 우리 수출의 경쟁관계 분석」, 2003.1 p4

석유제품을 제외할 경우 반도체가 최대수출품목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철강판과 컴퓨터, 의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다만, 석유제품의 수출비중이 '90년의 3.7%에서 2003년에는 20.4%로 급증하는 등 수출품목의 구성측면에서 특정 품목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 상반기의 경우 석유제품(20.4%), 반도체(15.6%)가 전체 대일 수출의 36%를 점하여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어야 대일 무역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과거 대일 수출 주요 품목이었던 의류, 신발 등 경

공업 제품의 비율이 급감하고 중화학, 기계분야의 품목들이 수출 상위그룹에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를 참고하면, 수입측면에서는 반도체와 철강판이 부동의 1,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철강판의 수입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에 비해서, 2002년의 경우 반도체는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섬유 및 화학기계, 원동기 및 펌프 등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전자응용기기 등 자동차, 전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 품목이 늘어나 최근의 우리 경제의 중공업 관련 분야의 수요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표 5>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의 변화(%) 추이(MTI 3단위 기준)

순위	1990		1995		2000		2002		2003(1-5)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반도체	10.7	반도체	9.3	반도체	13.5	반도체	13.9	반도체	13.5
2	철강판	5.0	기타기계류	6.5	철강판	5.8	철강판	6.7	철강판	7.0
3	섬유및화학기계	4.5	철강판	4.7	반도체제조용장비	4.9	자동차부품	3.1	반도체제조용장비	3.8
4	원동기및펌프	3.5	계측제어분석기	4.4	기타기계류	4.3	컴퓨터	2.8	자동차부품	3.0
5	기타기계류	3.4	섬유및화학기계	3.1	컴퓨터	3.1	플라스틱제품	2.4	전자응용기기	3.0
계		27.1		27.9		31.6		29.0		30.2

자료: 산업자원부 「최근 對日 교역패턴의 변화 및 일본시장 내 우리 수출의 경쟁관계 분석」 2003.1 p4

<표 6>을 보면 일반기계를 포함한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입품목부문에 서 무역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대일 무역 역조에 일조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 대외 무역 규모가 늘어남에도 대일 무역 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계 부품 분야의 대일 의존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6>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대일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90	'95	'00	'02	'03(1-5)
일반기계	-46.0	-86.1	-49.3	-35.2	-16.1
반도체	-7.8	-2.0	-11.3	-15.6	-8.5
철강	0.3	-5.7	-14.7	-25.1	-12.5
반도체제조용장비	-0.1	-1.9	-15.0	-4.4	-5.0
전자응용기기 (계산기, 자판기 등)	-1.7	-2.3	-3.8	-5.5	-3.4
자동차부품	-3.8	-7.6	-5.5	-7.0	-3.3

자료 : 산업자원부 「최근 對日 교역 패턴의 변화 및 일본 시장내 우리 수출의 경쟁관계 분석」 2003.1 p 4

대일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선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여타 선진국의 상품보다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 주종품목이 소재나 기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것도 대일 역조 심화의 주요 이유가 된다. 한국 경제는 개발 초기부터 부품, 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한 후 이를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성장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산업, 무역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최근의 내수 위주의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효과, 중국, 아세안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과 가격 경쟁력 상실 등이 대일 무역 적자의 확대 유발 요인이 되었다.⁴⁾

즉, 일본은 거의 모든 공산품을 자체 충족하는 소위 풀세트형 자급체제를 구성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구조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력산업이 중복되는 부문이 많아 일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 내수시장 침투력이 뒤지는 우리나라 기업 으로서는 대일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⁵⁾

4) 재정금융사, 「대일무역적자의 확대요인과 전망」, 1992. 7. p52

5) 한국 개발 연구원, 「일본경제사회의 진화와 한·일 교역」.1988. p151
이기호의 상계논문. p 50. 재인용

<표 6>에서 보듯이 일반기계, 반도체, 철강, 전자응용장비, 자동차부품 등 주요 기계 부품 소재 분야의 대일 적자가 심각하며, 우리나라가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품목들의 적자 규모를 점차 줄이는 정책이 노력이 필요하다.

(3) 대일 수출 구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주종상품의 변화를 살펴 보면 국교 정상화 초기에는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어 수출을 주도해 왔고, 그 후 1970년대에는 농수산물과 석유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구조가 고도화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철강, 기계류 등의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져 수출상품의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표 7>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일 수출

단위(억 달러, %)

	수출금액(억 달러)			수출비중(%)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농수산물	20.7	18.1	15.3	13.0	8.8	9.3
석유제품	20.8	36.8	31.4	13.1	18.0	19.0
화학공업제품	11.2	14.4	13.2	7.1	7.0	8.0
섬유류	13.9	13.2	10.0	8.8	6.4	6.0
철강	13.6	15.7	12.4	8.6	7.7	7.5
기계류	6.2	7.6	8.4	3.9	3.7	5.1
전기전자	46.6	73.1	53.7	29.4	35.7	32.5
(반도체)	(18.7)	(27.5)	(18.0)	(11.8)	(13.4)	(10.9)
(컴퓨터)	(13.5)	(27.1)	(17.6)	(8.5)	(13.3)	(10.7)
대일수출 합계	(158.6)	(204.7)	(165.1)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무역협회, 「KOTIS Trade Database」 2002.4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 7>와 같이 2001년 현재 반도체,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제품이 19.0%, 농수산물이 9.3%, 화학공업제품이 8.0%, 철강이 7.5%의 순으로 대일수출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4) 대일 수입 구조

1960년대 초 수입구조는 식량, 완제품, 소비재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증가로 1차 산업과 경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이 낮아지는 반면에 기계류 등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이 계속 증가하였다.

<표 8>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일 수입

단위(억 달러, %)

	수입금액(억 달러)			수입비중(%)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화학공업제품	41.5	49.4	45.9	17.2	15.5	17.2
철강	23.8	30.3	27.6	9.9	9.5	10.4
금속제품	8.3	10.5	8.8	3.4	3.3	3.3
기계류	36.9	55.7	40.9	15.3	17.5	15.4
전기전자	84.9	109.1	87.1	35.2	34.3	32.7
(반도체)	(32.9)	(40.1)	(33.8)	(13.6)	(12.6)	(12.7)
(컴퓨터)	(5.6)	(9.9)	(8.3)	(2.3)	(3.1)	(3.1)
자동차	4.8	6.6	6.9	2.0	2.1	2.6
정밀기기	18.6	28.6	21.2	7.7	9.0	8.0
대일수입 계	238.0	314.0	262.6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무역협회, 「KOTIS Trade Database」 2002.4

이는 그동안 기계류, 부품 등 중간재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중간재나 자본재의 공급을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표 8>을 참고

하면, 2001년 현재 반도체, 컴퓨터 부품, 전자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제품이 전체수입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공업제품이 17.2%, 기계류가 15.4%, 철강 10.4%, 정밀기기 8.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6%의 순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이 취약했다. 그래서 대일 의존이 심한 자본재의 경우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자본재의 수입초과가 대일무역 역조현상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대일 주종상품은 공업용원료와 설비, 부품과 같은 자본재가 중심이 되어 왔다. 1980년 이후 국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본재의 대일 의존이 조금씩 낮아졌지만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부품·소재 적자가 늘어났다. <표 9>를 보면 2002년의 경우, 전체 대일무역 적자 147억 달러 중 부품·소재 적자가 118억 달러로 80,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의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부품·소재의 적자도 함께 급격하게 늘어남을 알 수 있는데, 대일 무역 역조의 점차적 개선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을 파악할 수 있다.

<표 9>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대일적자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전 산업	85	119	156	157	131	46	83	114	101	147
부품·소재	72	83	94	110	98	62	97	115	103	118

산업자원부 「참여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2003,4 p 21

2. 한·일 교역 의존도

한·일 양국의 교역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교역에서 일본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국의 수출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대일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한국의 수출이 신장되는 해에는 한국 교역에서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한국의 수출이 부진할 때에는 일본 시장의 비중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출입 의존도는 1993년에는 19.0%로 비교적 높았다. 1996년에는 일본 엔화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한국의 대일 수출입 의존도는 16.9%로 조금 하락하였으며, 1999년에는 13.5%를 차지하였다. <표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2년 대일 교역의존도는 13.9%가 되었다.⁶⁾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시장의 비중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구조는 지나치게 대일 의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류, 소재, 부품에 있어 지나친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은 종래 가공무역형태 산업구조에 따라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규모의 7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교역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동시에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대일 수입이 늘어나다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외환위기 극복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이후 한국경제의 신장에 따라 대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수출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외환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 이기호,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논문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2
한국무역협회, 월간무역, 「무역통계」, 2000년 2월, pp.52-53 재인용

<표 10> 한국 무역의 지역별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미국	36,066(21.7)	54,975(19.6)	48,702(18.5)	55,789(17.19)
일본	31,580(19.0)	47,216(16.9)	35,508(13.5)	44,999(13.86)
EU	19,585(11.8)	36,529(13.0)	29,653(11.2)	38,801(11.95)
중국	9,080(5.5)	19,916(7.1)	20,181(7.6)	41,154(12.63)
홍콩	7,366(4.4)	12,274(4.4)	8,904(3.3)	11,841(3.6)
아세안	17,363(10.5)	32,385(11.6)	26,855(10.1)	
중동	12,491(7.5)	20,798(7.4)	18,483(7.0)	28,380(8.7)
중남미	7,306(4.4)	13,353(4.8)	10,009(3.8)	12,607(3.9)
총교역량	166,036	280,054	263,954	324,597

자료 : 산업자원부, 「03-7산업자원부 수출입 실적」, 2003년 7월 p.21

한국무역협회, 월간무역, 「무역통계」 2000년 2월, p52-53

3. 대일 의존적 산업 구조

우리 나라 경제는 중간재와 자본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수입유발적인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의 표준화되고 성숙화된 산업 및 기술의 획득으로 후발성 발전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생략한 채 최종 제품 생산에 전력하였다. 1960년대 이전의 경제 발전 방식은 국내의 수급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대내 지향적 성장전략이었다. 반면, 19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 방식은 처음부터 해외수요를 고려한 생산활동에 비중을 둔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이었다. 1970년대 이후 국내 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분야의 가공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자체 기술개발 및 관계 부품 소재산업과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은 부품,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수입유발 구조로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성장에 필요한 막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도입하게 되었다.

구미 지역보다는 운송시간, 가격, 품질, 지리적 근접성, 언어의 상이성, 전통적인 유대관계 등 다방면으로 유리한 여건을 지닌 일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중간재 및 자본재의 도입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구조는 지나치게 대일 의존적으로 정형화되었다. 특히 일본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한국은 국제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놓인 기계류와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중화학 공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에 소요되는 기계·부품의 수입을 일본으로부터 크게 증가시킨 결과 자본재, 중간재 부문의 대일수입 유발적 산업구조가 더욱 고착화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부품, 소재를 조립, 가공하여 주로 미국, EU 등 여타 지역에 수출하는 소위 삼각 무역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무역 구조하에서는 한국의 전체무역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대일 무역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이다.

제 2 절 한·일간의 산업 정책 비교

세계 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한국 경제는 전혀 새로운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글로벌화된 국제통상의 현실에서 한국 경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WTO 체제하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무역에 임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무역정책에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국제 무역 환경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품 무역이 자유화되고 서비스와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각종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되어 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둘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 기술, 노동, 경영, 토지 등 각종 생산요소를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획득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무한

경쟁에 보다 더 잘 대처하기 위한 기업간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제휴가 생산, 기술,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 추진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산업 정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산업정책

WTO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 정부의 특정 산업 보조금 지급 금지, 그리고 기업활동의 세계화 등은 정부의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반드시 제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회도 제공해 준다. 특히 산업 구조 조정의 측면에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고급 요소 경쟁력을 보완하고, 사양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단순요소의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21세기를 맞아 정부는 경쟁에 대한 자신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금껏 그 개혁방안이란 것들이 하나같이 단편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총체적 변혁이다.⁷⁾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이 상호 보장,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일치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역개방은 비효율적인 내수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기업들이 활발한 국내 경쟁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해줄 것이다. 새로운 기업지배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는 기업들에게 이윤창출의 중요성을 더 한층 고취시키고 독특한 전략을 추구하도록 북돋울 것이다. 대학교육과 인센티브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더 한층 혁신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산업을 배양, 육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진

7) 신동욱 옮김, 마이클 포터 저 「Can Japan compete?」 세종연구원.2001. p 269 발췌 인용

전이 같은 보조로 고르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산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의구심과 우유부단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정책은 경제 개발 계획의 공업 개발전략에 맞추어 주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제1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1962~1966)에는 경제 자립을 위한 기초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역점을 두었다. 제2차 계획 기간(1967~1971)에는 자본재의 수입대체와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대외지향형 공업화의 기초 아래 해외 의존적 개발전략이 추진되었다. 제3차 계획기간(1972~1976)에는 중화학 공업의 건설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산업구조와 수출구조를 고도화시켰지만, 과잉·중복 투자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도 초래하였다. 제4차 계획기간(1977~1981)에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력성장구조의 실현을 위하여 기술혁신과 능률향상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역점을 두었다. 제5차 계획기간(1982~1986)중에는 그 동안 건설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 우리 경제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투자배분의 기본방향을 생산성향상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에 두었다. 그리고 소재공업의 내수 위주로의 개발, 자본재공업의 정상가동 확보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기능 및 노동집약적인 전자·기계 공업의 지속적인 개발에도 주력하였다. 제 6차 계획기간(1987~1991)중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자율의 폭을 크게 확대하고 시장경제 창달에 주력하였으며,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과 형평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개방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 시기의 산업 구조는 그 이전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 농림·어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그 후 WTO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개방과 기업구조조정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산업 정책도 현실에 맞게 수립해 가고 있다.

2. 일본의 산업정책

전후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는 다른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경제 정책들은 일본의 성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아예 ‘일본식 정부 모델(Japanese government model)’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일본식 정부 모델의 핵심은 경제개발 과정과 경쟁력의 원천 등에 대해 특별한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특정 유형의 경쟁 양상을 은연 중에 회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을 희석시켜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전반에 적극 간섭하고 나서게 된 데에는 그 어떤 기업도 가질 수 없는 광활한 통찰력을 정부만큼은 지니고 있다는 나름의 이론적 근거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일본 정부가 추구했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신념을 전제로 구축되었다.⁸⁾

첫째,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한다.

둘째, 특정 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나, 수출,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있어 다른 산업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셋째, 특정 산업 분야는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이들의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 경제성장을 위한 특정 산업 분야의 타깃팅

정부는 바람직한 산업분야를 타깃으로 삼아 적극 지원했다. 타깃팅(targeting)은 기업들에게 배포되는 정책 지침과 정부당국이 마련해 널리 확

8) 위의 책 p 54 요약 인용

산 배포하는 정부의 공식적 경제 비전은 물론 법령에까지 명시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타깃팅에는 관련 산업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이 항상 깃들여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도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어떤 명시적인 보조금 또는 세금 혜택 등의 제공 없이 해당 산업의 중요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타깃팅의 신호로 활용했다. 그러나 특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여전히 계속됐다. 정보 기술을 진흥한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등의 명분 아래 정부의 간섭은 계속 이어졌다.

(2) 공격적인 수출 진흥

쓸 만한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는 일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수출 가능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타깃으로 선정된 산업들은 수많은 수출 진흥 시책들을 통해 특별히 우대되었다. 예컨대 수출증가율에 비례해 감가상각을 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시중 금리를 밀도는 저렴한 이자율의 자금 융통, 그리고 부품 및 원자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저리 융자금 혜택 등이 주어졌다.

(3) 광범위한 ‘지도’, 사전승인제도 및 각종 규제

일본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에는 공식적인 정부 승인제도로부터 이른바 ‘행정지도’를 비롯해 해당 산업계 협회와 협의해 정하는 ‘자율’ 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예컨대 증권업계의 경우 관련 회사들은 사업 면허를 따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지점을 신설하고, 기업간 합병을 추진하며, 전통적인 증권 서비스업 이외의 분야에 진출하는 것 등 시시콜콜한 결정 사안들에 대해 모두 대장성(MOF: The Ministry of Finance)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MOF 당국자들은 정식 법령과 규칙에 더하여 수많은 가이드라인들을, 그것도 많은 경우 구두로 제시했다.

(4) 국내시장의 선별적 보호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품들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은 종종 일본시장에서 배제되었다. 특별히 선정된 일부 성장산업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그들의 국제경쟁자들을 따라잡도록 하기 위해 각종 무역 및 외환 통제 수단들이 동원되었다. 여기다 원자재로부터 최종제품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광범위한 산업 영역이 모두 보호 대상이었다.

(5)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엄격한 제약과 국내 소유권에 관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애매모호한 규칙들 역시 외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여타 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들과 미성숙 산업(infant industry)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국내로 향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공식적, 외형적 규제조치들은 전반적으로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해 1973년 대체로 완결되었다. 하지만 자동차(1971년), 집적회로(1974년), 제약과 컴퓨터(1975년), 정보처리와 사진필름(1976년) 등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계속되었다.

(6) 반독점 규제의 느슨한 집행

성장 산업에서 집중 육성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큰 규모의 소수 기업들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주요 산업 분야의 집중도를 높이는 대형 합병 사안들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일본 정부는 신규 설비투자를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석유화학, 합성섬유, 펄프 및 제지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는 과잉 생산설비와 이에 따른 과당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7) 정부주도의 산업 구조조정

일본의 정부 기획 당국자들은 각 산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규제하고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관료들은 또한 일본 기업들이 너무 왜소하여 규모의 경제가 지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각급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을 서로 쪼개 나눠 갖도록 권장했다. 기업 합병은 특히 적극 장려되었다. 합병만큼의 규모의 경제를 쉽고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어 일본 기업들이 거대하고 막강한 글로벌 경쟁자가 된 1990년 대에도 일본 정부 주도 사고방식이 깊이 고착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기업들의 몸집을 키우고 과당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때로 적극 나서서 기업합병을 주선하기도 했다.

(8) 카르텔의 공적재가

경기순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합법적인 카르텔을 활용해 기업규모를 더욱 키우며, 곤경에 빠진 산업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경기 하강 국면에서 경쟁 기업들 사이에 생산량 및 생산 설비의 감축 부담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규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불경기 카르텔이 고안되었다. 이는 해당 산업계의 고사를 막고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다수의 산업계에 여러 가지의 카르텔 구성을 재가해 주었다.

(9) 고도로 규제된 금융시장 및 제약된 기업지배

세계대전 이후 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들이 잇따라 일본에 도입되었다. 은행과 증권회사들을 분리하고 특수 목적 금융기관들(장기대출 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신설하기 위한 법령들도 이때 모두 도입되었다. 금융시장이 아직 미개발 상태인데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은행 대출이 압도적인 상태이던 당시, 이들 규제는 희소한 금융자원을 필요한 산업 분야에 적절히 분배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지속적인 규

제 완화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때 만들어진 기본 틀은 1990년대에 이르도록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10) 정부 지원하의 공동 R&D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공동R&D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 데 비중있는 역할을 해 왔다. 이는 R&D 고정비를 많은 참여자들이 분산 부담토록 하고 한 연구 과제를 여럿이 나눠 수행함으로써 낭비적인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다. VLSI(특대 규모 집적회로: Very Large-Scale Integrated Circuit) 프로젝트는 정부가 일부 돈을 낸 아주 유명한 대표적 사례였다. 이는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선진국을 따라잡는데 일조하고자 고안된 것으로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수행되었다.

제 3 절 한·일간의 무역 정책 비교

1. 한국의 무역 정책

한국의 무역 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 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이는 수입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 무역확대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간·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립 및 집행되어 왔다.

한국의 무역정책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보호주의적 정책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한국 무역정책은 개방정책 추진으로 특징지어진다. 1970년대 초반 공업화의 과정에서 수입대체정책이 추진되었고, 1970년대 전·후반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있었다. 그리고 중화학 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의 조정국면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 수

입자유화 정책기조가 단속적으로 중단되었다. 그 결과 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 1979년대의 무역정책 특징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를 표방하였으며 한국의 정책당국자들간에도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순조로운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체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반적인 경제체제 개방화의 일환으로써 수입자유화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장의 개방정책에 따라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수입자유화율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보완적 정책과 함께 실시되었는데 첫째, 강력한 수출촉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입자유화로 빚어질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둘째, 점진적인 자유화정책을 취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경쟁력 보강을 위한 기회를 주었다. 개방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수입자유화정책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따라서 1980년대의 통상정책은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중상주의적이며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에서 자유무역주의 기조로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책기조의 전환기를 맞이한 데는 수출이 국내에 부족한 금융자원을 확보하고, 수입은 국내에 부족한 실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 경제가 민간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기조의 채택을 선언하였고,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을 대외개방,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WTO 및 OECD가입으로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 규범에 일치시키고, 서비스 및 직접 투자의 개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WTO의 창설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90년대의 새로운 무역환경의 전개에 따라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적 무역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도 크게 변화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통상여건을 보더라도 WTO출범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라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기업들 간의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되는 등 자유화 및 개방화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은 국내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다. 첫째, WTO, OECD 등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 기술협정 등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논의 및 투자·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 작업 등에 참여한다. 둘째, 양자 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권역별 통상전략을 수립하며, 선진국과는 산업·기술 등의 면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 시장에 대해서는 진출 기반을 강화하여 교역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및 투자조치를 WTO 분쟁 절차 등 다자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국제 영업활동의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APEC, ASEM 등 개방적 지역경제협력체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사업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역내국가간 지역 경제 협력을 구축한다.

2. 일본의 무역정책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제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 입장에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블록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세적인 입장의 통상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또한 자국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수입할당제도의 점진적인 축소, 수입검사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해 왔으며,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에 입각한 국제 분업을 확대시키는 통상정책을 실시해 왔다. 일괄자급형 경제구조(full set economy)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는 일본 경제의 특성상 안정적인 원료공급원의 확보를 위해 자원의 현지개발과 함께 자원생산국에 대하여 차관과 기술 공여 등 경제 협력을 우

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차대전후 1970년대 초까지는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3%를 상회하였고 무역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철강을 비롯한 중화학 공업 분야를 유치산업으로 보호·육성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1970년대 초반부터는 일본경제에 대한 개방화 요구가 급증하였고, 일본 정부도 개방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단계적인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무역흑자 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자 통상 마찰 분야가 자동차, 금융, 서비스분야는 물론 첨단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미국은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자체를 문제삼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속적인 자유화조치를 시행해 왔고, 미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통상정책은 무역관련 경쟁정책과 경쟁관련 무역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통상정책기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본시장에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한 기업활동의 보장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통상분쟁 대상도 일본의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 계열기업의 합리화, 유통구조의 개선 등 무역과 경쟁정책이 연계된 분야가 부각되었고, 통상정책의 범위 역시 과거의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중심의 국경조치에서 민간부문의 배타적 상관행 등 국내의 시장구조적인 문제를 포괄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내용은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은 자국의 최대교역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정책을 실시해 왔다. WTO의 출범과 더불어 일본의 무역정책도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부응하여 진행하고 있다.

(1) 일본의 무역정책의 특징

일본의 무역정책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관료들이 주도하는 비공식적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무역정책은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까지 입안·실행할 정도로 깊이 개입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간에는 자문기구를 통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문기구들은 소비자들보다는 생산자와 무역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무역정책의 시행이 일본시장을 상당히 폐쇄적으로 만든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⁹⁾

둘째, 수출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무역마찰이 심화되자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또는 수출 감시(Export Monitoring)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이론적으로 잘 설명되듯이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지대(rent)를 전부 수출국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은 무역마찰 해결수단이기도 하였다.

일본은 다자간 교역체제를 저해하는 지역적·쌍무적·일방적 접근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동시에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무적 협상을 통해 수출자율규제, 수입자율규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처럼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에 자주 의존함으로써 일본이 오히려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확대에 기여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일본이 자국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 등 상당히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쌍무적 협상을 통해 수출자율규제를 유도한 것은 일본 무역정책의 이중성을 잘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셋째, 구조적인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열관계, 배타적

9) 강인수와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1년 8월 p482-483

거래관행, 가격 메커니즘, 저축·투자패턴, 토지이용, 복잡한 유통시스템 등의 구조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 기업의 계열화는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거래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산업 거래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이를 반경쟁적 기업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기업관행도 외국기업의 일본진출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일본 기업문화는 상호간의 인간적인 유대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안정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섭과정이 상당히 중요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자주 지연되고 불투명하며, 리베이트제도가나 반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적·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통상정책의 집행 결과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다.

(2) 일본 무역정책의 전망

199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 경제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한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시장의 통합, 산업환경의 변화 등 세계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전제로 한 종래의 기업경영·산업정책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한층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세계 경제 활동에 기여하여야 사명감을 갖고, WTO체제하의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자유경쟁체제의 세계 무역환경하에서 다중적인 대외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폐쇄적인 유통구조같은 상거래 관행을 수정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일치시키는 자기개혁을 진행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IT관련 산업 정책 적극적 추진
- ② 국제 조화와 민간 경제활동 참여
- ③ 선진국간 협력 강화와 개도국 지원
- ④ WTO에 의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강화와 병행하여 NAFTA나 EU확대 같은 지역 간 제휴 추진

제Ⅲ장 한·일간의 무역 불균형의 원인 분석

제 1 절 한·일 무역 불균형의 원인

한일 교역이 확대되어 가면서 대일 무역역조도 심화되어 가는 한·일간의 무역 불균형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양국 산업 구조의 동질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지정학적인 위치, 기후, 자연자원, 각종 제도 뿐만 아니라 원료수입, 가공, 완제품 수출이라는 무역패턴 등에서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일본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산업구조와 무역 정책면에서 동질적이기 때문에 경쟁적이며, 기술격차에 의한 제품 생산면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일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산업구조상의 요인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현안은 무역역조의 지속적인 심화 추세이다. 더욱이 이러한 무역역조가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대일 무역 역조 원인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한일 공업제품에 대한 무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생산에 있어서 수출특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섬유제품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인 최종 소비재에서 수출특화의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은 수직적인 분업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조적인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보완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재의 대일 수입은 크지만 소

비재의 대일 수출이 적은 규모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폭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계류 부품 소재산업의 국산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¹⁰⁾ 한국의 농업기계 분야는 소형기종의 국산화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으나, 중·대형 기종의 경우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노트북 PC의 국산화율이 40%, 캠코더의 국산화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완제품의 국산화 비율에 비해 더 낮은 실정이다.

반면에 일본의 산업구조의 특징은 풀세트(FULL SET)형 구조이다. 풀세트형 산업조직이란 1차 원자재만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소재 가공 조립을 통하여 최종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전 가공단계를 생산하고, 각 단계별 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는 내부조달을 통하는 일본 특유의 산업구조를 지칭한다. 일본이 구미 선진국제국으로부터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원칙이 처음에는 새로운 생산물의 수입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국내 대체화 시기를 거쳐 결국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가는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하고자 만든 구조가 풀세트형 산업조직이다. 일본 경제는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까지 거의 대부분의 산업 단계를 자국 내에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재료 수입의존형의 일본 경제의 현실에서 가능한 한 원재료와 식량 이외의 수입을 억제하고, 반대로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산업을 최대한 육성해야 하는 역대 일본 정부의 방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업 패턴은 일본과는 확실히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식료품이나 펄프, 종이 등의 자원집약재 산업은 물론이고, 특히 중화학 공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수입의존도가 높았다.

대일 무역 불균형의 요인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한국경제는 일본과는 달리 중간재와 자본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성숙

10) 송재열 「대일 무역 역조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세계경영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논문 1996.8 p21

화된 산업과 기술의 존재에 힘입어 후발성 발전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부품 및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생략한 채 최종제품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의존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는 처음부터 해외의존을 목표로 하는 대외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무시된 가운데 최종 가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국내의 산업간 관련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급속한 대외 지향적인 공업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수출증대가 수입증대로 이어지는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둘째, 수출입 상품의 편중성이다. 2002년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공업제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의류, 컴퓨터 등 4개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90년과 대비해 볼 때 대일수출 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인 반면 동 비중이 감소한 품목은 의류, 신발, 철강관 등이다.

한편, 대일 수입상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반도체, 철강관, 자동차부품, 컴퓨터, 플라스틱 제품이 전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90년과 대비해 볼 때 대일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부품이며 동 비중이 크게 감소한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철강,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구조는 반도체, 석유제품, 기계류, 컴퓨터, 철강 등 중공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경공업 제품의 비율이 높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편, 대일 수입 구조는 반도체, 철강관,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 전자응용기기기계 등 중화학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전자전기와 정밀기계의 수입비중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조립 제품의 대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출부진 요인으로 대일수출품의 경쟁력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최근 일본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주요 제품들은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품질수준도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섬유, 가전제품, 신발, 완구 등 주요 대일 수출 품목들은 경쟁국 제품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또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산업이나 국제적 브랜드 기업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품질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중저가 품목은 이제 우리 제품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자본 및 기술 도입의 대일 편중

(1) 자본재 산업 대일 의존도

기계부품을 비롯한 자본재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을 따라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의 무역구조는 원재료, 중간제품, 자본재를 대규모로 수입하여 이것을 조립 가공한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조립가공형 무역구조이다. 자연자원기반이 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한국으로서는 이를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자본재 수입비중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이것이 대일 무역역조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매년 20억 불 이상의 자본재 수입을 하고 있다. 대일 의존이 과도하게 높은 원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서구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즉, 운임 및 보험료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수입 후에도 부품의 공급과 애프터 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단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다.

둘째, 경제·사회 문화면에서의 긴밀성 및 유사성을 들 수 있다. 광복 후 생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일제하의 시설 및 기술이 잔존해 있었다. 그리고 양국민들의 기호 및 생활습관이 비슷하여 일본제품의 사용

이 용이하였다. 한국측에는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상담을 진행하는 데에도 구미제국에 비해서 일본이 비교적 편리하였다.

셋째, 한국이 외자 및 기술 도입을 하는데 있어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자본재 수입에의 대일 의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대일 기술 도입 편중

우리 나라가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기술료에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 이전비를 뺀 기술무역수지의 역조가 심화되었다. 아울러 기술 수입 대상국의 특정국 편중도 기술종속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1995년의 경우 미국 49%, 일본은 36%였다.¹¹⁾ 선진국의 기술무기화가 정보통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처럼 편중된 기술도입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 되고 있다. 원천기술 확보 없는 기술종속이 계속되는 한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의 내용을 보면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포함된 완전한 기술보다 기술정보 자료, 기술지도, 용역 등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응용차원의 기술이 많은 편이다. 우리 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수요증대로 인해 화학, 전기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對韓 직접 투자 및 기술이전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패랑 효과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기업 레벨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의 기술 이전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사분규와 근로의욕의 감퇴, 임금인상, 물가고 등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對韓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이 주로 일본의 在韓 합작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일 양국간에는 산업 기술의 형태, 성과, 관련 국내정책 등에 대한 기본 인식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한일 산업협력의 동기 면에서 한국은 주로 기술도입에 의한 자체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출증대, 수입대체를 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수

11) 상계 논문 p27

출시장의 확보, 저임 메리트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협력형태에서 우리 나라는 합작투자나 기술 도입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측은 단독투자나 OEM수입 등을 선호하고 있다.

성과면에서는 일본측은 한국의 산업기술 발전 및 수출증대에 일본의 기술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일본의 對韓 산업기술 협력이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대일 역조 개선에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측의 평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간편하고 손쉬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단기적인 시장성과를 높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 등의 지나친 대일 의존 체질을 고착시켜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술도입이 조립가공 분야에 치우침에 따라 국내산업의 경쟁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양국의 산업협력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평분업이 진전되지 못함으로써 상호간의 균형적인 교역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일 수출보다는 대일 수입이 급증하는 과행적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그간의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가 대부분 저임금이나 생산비용상의 이점을 활용하는 단순생산 기지화에 치중하고 있고, 핵심기술이전을 수반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대한 직접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의 투자규모가 크고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는 소규모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출시장 및 기간의 제한, 자사 생산기계류 및 상품사용 의무화 등 우리측에 불리한 부대조건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3. 일본 시장의 무역 장벽

일본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은 상당히 까다롭다. 일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인 가운데서도 가장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의 하나이다.

하지만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거나 일본의 유통구조, 배타적 기업관행, 기업계열화 등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무역장벽을 정확히 분석하 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장벽을 관세와 비관세장벽, 유통구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관세 제도

일본정부는 그 동안 매년 시장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인하해 온 결과 현재 평균관세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세율의 산업정책적 도구로서의 기능과 시장 메카니즘으로서의 일부 기능을 고려할 때 일본의 관세율체계는 부분적으로 선진국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행 일본의 관세율 체계는 자국 산업 중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이미 우위를 상실했거나 또는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산업에는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자국산업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심한 자국 산업의 경사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및 자국산업의 비교 우위 분야인 기계류에 대해선 무세 또는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공업제품에는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주종 품목인 섬유, 신발, 혁제품 등에 대해서 10~20%의 고관세를 적용하여 대일 역조 심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WTO 규범에서는 첫 번째 주요 원칙이 차별없는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GATT 1994제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MFN) 원칙은 WTO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는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또한 관세도 수입물품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되어서도 안 된다.¹²⁾

일본의 경사적 구조 관세는 WTO 규범에도 어긋나는 교묘한 정책임을 알

12) 강인수 외 「국제 통상론」 박영사 .2001년 개정판 p.104

수 있으며 보호주의 통상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표 11> 한국과 일본의 관세 및 교역(20개 부문)

(단위: %, 백만 달러)

	한국			일본		
	관세율	대일 수입액	총수입	관세율	대한국 수입액	총수입
1.곡물	6.9	1	5,452	397.0	14	10,546
2.원료농산물	74.1	29	3,408	37.9	142	13,097
3.축산물	17.5	19	2,336	56.9	413	13,062
4.임산물	2.3	2	852	4.7	2	3,727
5.수산물	11.7	36	180	6.8	383	2,606
6.광물자원	2.6	29	22,509	0.0	33	49,795
7.가공식품	45.5	295	5,398	37.3	1,459	34,912
8.섬유	8.0	617	4,456	9.1	865	11,084
9.의류·피혁	7.2	96	3,060	13.3	1,018	20,791
10.석유화학	7.7	4,665	18,576	3.0	2,933	35,896
11.금속	7.3	3,790	19,741	3.0	2,481	21,308
12.승용차·부품	8.0	697	3,123	0.0	119	11,595
13.기타수송장비	2.8	118	3,363	0.0	35	6,128
14.전자제품	8.0	5,832	19,966	0.0	3,368	40,512
15.기계장비	7.9	11,623	28,827	0.2	1,700	37,621
16.기타제조업	7.2	1,675	8,803	1.8	851	34,912
17.건설	0.0	2	71	0.0	2	6,918
18.무역·운송	0.0	1,045	11,781	0.0	559	51,819
19.금융	0.0	27	506	0.0	134	9,654
20.기타서비스	0.3	281	11,183	0.0	33	31,500
총합계		30,877	173,591		16,843	447,481

자료: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12. p47 인용

관세장벽은 각국이 정한 관세율에 기초해 부과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국의 관세율표는 품목별 양허 관세율과 최혜국

(MFN)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최혜국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혜국관세율로 관세장벽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국가에 따라 최혜국관세율이 실효관세율¹³⁾과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극단적으로 중국의 경우, 2000년 현재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이 15%대이나, 실효관세율은 2~3%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혜국관세율과 실효세율간 차이는 주로 중간재투입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련이 깊다. 즉, 수입자는 중간투입재가 통관될 때 관세를 납부했다가 이들 중간투입재를 이용해 생산된 재화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받기 때문에 실효관세율이 최혜국관세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최혜국세율과 실효세율간 차이가 없으므로 실효세율을 관세장벽의 지수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¹⁴⁾

쌀, 밀 등 곡물류와 유지종자, 식물성성유 등 원료농산물에 대한 한·일 양국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양국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기보다는 주로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농산물 가격이 제3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과 밀에 대해 일본은 각각 409%와 249.2%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관세율은 5%와 3%로 낮게 제시되어 있다.¹⁵⁾ 이는 한국의 경우,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쿼터내 물량(in-quota)만큼만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쿼터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훨씬 높다.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임산물 및 양모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4억 300만 달러를 수입한 육가공류의 경우, 양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의 관세율(58.2%)은 한국(25.8%)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석탄, 가스 등은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유에 대해서는

13) 실효관세율은 총수입대비 관세수입의 비율임

14)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12 p43

15) 해당 수치는 정인교의 상계 논문에서 인용

수입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GTAP데이터 베이스는 제시하고 있다.¹⁶⁾ 1997년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연간 각각 300억 달러와 42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한·일 양국간 교역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제조업에 대한 양국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다만 의류, 섬유, 피혁제품 등에 대해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들 품목은 18억 달러에 달하고, 일본은 매년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품을 전세계로부터 수입한다는 점에서 무역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6~8%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온 중심세율 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1~3%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승용차와 부품, 기타차량, 전자제품 등에 대해 일본은 무세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 정제유, 화공, 고무, 플라스틱, 철강 등에 대해 일본은 2~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섬유 및 의류와 마찬가지로 무역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해 양국은 기본적으로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비스 및 오락 서비스 등에 대해 양국은 0.4%~0.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양국간 교역액은 2억 달러 미만이다. 서비스 분야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한일 FTA가 체결되면 서비스 분야의 교역 장벽 해소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2) 비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교역을 저해하거나 교역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관

16) 미국 퍼듀대학교의 허텔(Tom Hertel)과 맥듀걸(Rob MacDougall) 등이 UNCTAD, WTO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한 GTAP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된 실효관세율인데, 동 데이터베이스의 산업별 관세율은 GTAP 데이터베이스의 무역데이터와 일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p43에서 재인용

세의 모든 조치를 비관세장벽(NTM)으로 부른다. 대다수의 비관세장벽은 행정절차와 정부규제 등의 형태로 시행되는 차별적 조치들이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쿼터와 자발적 수출제한(VER)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특정 상품에만 적용된다. 심지어 환율, 금융 및 재정 정책 등도 교역에 대해 왜곡 현상을 초래할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관세장벽과는 달리 비관세장벽은 각국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하거나 수량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가지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즉, 비관세장벽은 무역장벽 혹은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과연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경제전반을 고려할 때, 1996년 현재 한국의 비관세장벽 빈도¹⁷⁾는 0.1%이하인 반면, 일본의 빈도는 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⁸⁾ 수입적용비율에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적용비율은 0.42%인데 비해, 일본은 54.54%(전 산업을 대상으로 함)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제조업보다는 기초산업에 적용되는 비관세장벽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1996년 OECD가입을 계기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상당한 개선(7.2%에서 0.42%)로 비관세장벽 적용비율이 낮아짐이 이루어졌으나, 일본은 5.8%에서 5.4%로 겨우 0.4%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일본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로 비관세장벽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7) 비관세장벽의 빈도란 실제수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비관세장벽의 적용대상인 특정산업에 속하는 관세세번의 비율을 가리키며, 수입적용비율은 각 산업에 속하는 수입액 중 해당 비관세장벽이 적용되는 수입액의 비중이 된다. 비관세장벽의 빈도나 수입적용비율은 해당 비관세장벽이 가격, 생산, 소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수입적용비율은 극단적으로 수입을 불허하는 비관세장벽일 경우 수입적용비율이 0%로 나타나, 지수가 실제교역장벽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18) 상계 논문 p 49

기초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핵심비관세장벽의 빈도는 아주 낮은(0.1%) 반면, 일본의 경우는 5.6%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일본보다 한국의 장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94%, 일본은 55%의 관세율에 상당하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비관세 장벽의 범주에 포함되는 무역관련 조치로서는 크게 수입과징금, 복잡한 통관절차, 까다로운 기술규정 및 표준제도, 수입식품에의 엄격한 검역·검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잡한 통관절차

일본은 특별한 경우(예를 들면,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나 외국환 관리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금의 지불방법에 의해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승인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해지고, 승인 수입량도 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승인에 일관성과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수입업자가 수입할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수입 할당 신청을 하여, 수입할당을 받아야 한다.

② 까다로운 기술규정 및 표준제도

일본은 지난 1985년 이래 기준·인증제도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 민원처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입품의 국내시장 접근에 장애가 되는 표준, 검사, 인증절차에 대한 외국인의 고충을 처리해 주고 있다.

한편, 수입과 관련된 일본의 강제적인 기술 규정 관련 법률은 50여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각각 다른 주무부서가 통제하고 있다. 또한 품질을 표시하는 각종 인증제도는 사실상의 강제표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일본 공업규격(JIS), 일본 농업규격(JAS)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농산품이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표준규정에 의거하여 포장 및 상표부착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위생규정에 의거하여 수목보호법, 동·식물 검역법 등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농산품의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될 수 있다. 기술 규정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보다 더욱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표 12>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한국기업의 일본 진출시 애로사항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시 애로사항
-수출입관련 특수차량 일시 수입통관 불허	-불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수산물 수입쿼터 차별적 운용	-복잡한 통관절차
-피혁제품에 대한 관세할당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견직물에 대한 수입제한	-행정상의 차별적 규제
-복잡한 인증 마크 취득 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지나치게 엄격한 정부조달 규정	-노사문제

자료: 외교통상부(2000)와 전경련(2001)에서 발췌·정리

<표 13>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비관세 장벽¹⁹⁾

(단위:%)

	비관세 장벽		일본의 내외 가격차 ³⁾	관세율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기초산업 ¹⁾					
1.곡물	489.8	657.4		6.9	397.0
2.원료농산물	298.3	272.5		74.1	37.9
3.축산물	89.5	211		17.5	56.9
4.임산물	n/a	n/a		2.3	4.7
5.수산물	n/a	n/a		11.7	6.8
광공업					
6.광물자원			201	2.6	0.0
7.가공식품			176	45.5	37.3
8.섬유			153	8.0	9.1
9.의류·피혁			155	7.2	13.3
10.석유화학			160	7.7	3.0
11.금속			135	7.3	3.0
12.승용차·부품			188	8.0	0.0
13.기타수송 장비			188	2.8	0.0
14.전자제품			130	8.0	0.0
15.기계장비			264	7.9	0.2
16.기타제조업			160	7.2	1.8
서비스산업 ²⁾					
17.건설	16	5.0		0.0	0.0
18.무역·운송	94	55.1		0.0	0.0
19.금융	24.3	17.6		0.0	0.0
20.기타서비스	40.5	31.1		1.3	0.0

주: 1)기초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김남두(1996)와 Suzunami외(1995)에서 발
 채하였음. 품목별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평균값을 사용하였다.²⁰⁾

2)서비스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Choud외(2001)에서 발채하였음.

3)일본 경제산업성(2001)의 조사에서 제시된 평균값임

자료: 김남두(1996), Suzanamid 외(1995) 일본 경제 산업성(2000. chou(2001)).

(3) 유통구조상 장벽

외국기업 또는 외국제품이 일본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유통과 관련해

19)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12 p55

20) 비관세 장벽은 Chou 외 (2001)에 제시된 관세상당치를 사용하였다.

느끼는 장애 요인은 ① 유통구조적 측면 ② 거래관계적 측면 ③ 거래관행적 측면 ④ 제도적·정책적 측면 ⑤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

첫째, 외국기업이 일본시장에 접근하는 데 느끼는 일본의 유통구조상의 장애 요인은 유통구조의 다단계성 및 복잡성, 유통경로의 다양성·폐쇄성, 도소매 기구의 소규모 영세성·과다함, 제조업자의 유통지배와 유통계열화, 종합무역상사의 존재 등이다. 이러한 무역장벽은 일본의 특수한 경제 사회적 여건에 의해 형성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본 내에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각 업종에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유통계열화는 일본의 폐쇄적 거래관행을 존재케 하는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외국 기업이 일본과의 거래에서 느끼는 거래 관계상의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장기적·계속적 거래관계의 형성, 위험분산·다품종 소량·고빈도의 구매행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풍토에서 긴 형성과정을 통해 정착되어 온 것으로, 외국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힘든 요소이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외국의 시각에서 단순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요소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이러한 풍토를 이해하고, 스스로 일본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국제적으로 보편화·일반화된 거래 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과도하게 일본 국내 기업 중심의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을 배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일본 국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폐쇄적·반소비자적인 것이 된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셋째, 거래관행상의 장벽으로는 재판매가격 실시, 반품, 리베이트, 지역 제한제, 파견점원제 등, 일반적으로 외국에도 존재하나 특히 일본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래관행이 있다. 이뿐 아니라 기업집단 내 거래, 계열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거래 당사자 간 상호거래, 종합상사의 수입 총대리점

21) 김양희·조병택,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2002.12 p70-73

으로서의 역할, 경쟁품의 취급·판매 제한, 관련업계단체의 수입 억제 행위, 수입총대리점제 등 일본의 고유한 관행들도 외국기업에는 중요한 거래·유통장벽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일본 유통시스템은 그 구조와 관행면에서 외국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외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일본의 유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숙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복잡하고 긴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유통관행에 적응하려면 그만큼 제품가격에 그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기업은 일본 시장에서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한편, 한국 기업의 생산 대부분은 아직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다. 한국내에서 자체 유통망을 정비해 일본시장에 진출할 만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일본의 수입 총대리점이나 종합상사에 의존하는 예가 많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일본 유통 구조상 매우 독특한 존재로, 금융, 리스크 분산 등 다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종합상사는 외국 제품의 일본시장 진입시 수입총대리점으로서 가장 주요한 유통경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일본시장 진출시 가장 애로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합상사의 존재이다. 자체 유통망이 없는 대다수 국내기업은 일본의 종합상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종합상사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취약하다.

해외로부터 일본의 유통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철폐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 것은 ‘미일 구조 협의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일본의 유통장벽은 오랜 기간 일본식 관행으로 정착되고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뿌리내려진 것으로,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을 철폐하거나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데 난점이 있다. 설령 유통시스템이 엄연한 유통장벽으로 인식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시적인 구조나 제도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암묵적이어서 포착하기 곤란한 관행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한·일간 무역 및 산업 정책이 대일 무역 역조에 미치는 시사점

우리나라의 산업 무역 정책은 경제 개발 계획의 공업 개발 전략에 맞추어 주요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3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에는 중화학 공업의 건설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물론 이시기는 중화학 공업에 대해 집중적 투자를 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산업 구조와 수출구조를 고도화시켰지만, 과잉·중복 투자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간재와 자본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수입 유발적인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선진국의 표준화되고 성숙화된 산업 및 기술을 활용하여 후발성 발전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상품 및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생략한 채 최종 제품 생산에 전력하였다.

특히, 1970년 대 이후 국내 산업은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분야의 가공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자체 기술 개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산업의 질적 성장에 절대 필요한 부품·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수입 유발 산업 구조를 초래하였다. 특히 자본재, 중간재 부문에 있어서 대일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소재를 조립, 가공하여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이 시정하기 어려운 대일 무역 역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일본은 1차 원자재만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최종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전 가공단계를 생산하는 플세트 구조의 산업 구조 정책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산업단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부품·소재관련 산업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개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처음부터 해외의존을 목표로 대외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해외에 의존하게 되어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무시된 가운데 최종 가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정책은 저절로 수출증대가 수입증대를 야기 시키는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교역규모가 늘어날수록 대일 무역 역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전후 최악의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아직도 따라 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양국간의 정책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산업무역은 단계별로 근본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하였다. 반면 한국의 산업 무역정책은 일시적인 외형 성장에 치중하여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해외에 의존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한·일 양국간의 산업 무역 정책 차이가 좀처럼 개선하기 어려운 대일 무역 역조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Ⅳ장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방안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대일 수출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대일 수출 신장세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고 대일 수출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여야 한다. 수출가격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기업도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존하는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대일 수출확대 체제로의 전환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일본시장의 경우 무엇보다도 상품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 애프터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저렴한 가격에도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초로 한 상호신뢰와 장기적 안정거래를 추구하는 일본의 구매 패턴을 고려하여 일본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하에 효과적인 대일 수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1 절 산업·기술분야의 개선

1. 대일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

중국, 아세안 국가들의 저가공세로 우리의 대일 수출이 일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대일수출 신장세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고 대일수출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원화절하, 수출금융융자단가 인상, 대일 수출금융장려를 위한 금융지원상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기업도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존하는 자세를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수출기업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일 수출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대일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저가품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후발 도상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상실의 대안으로 생산설비의 자동화와 원가절감에 의한 생산성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기업에 비해 인건비, 재료비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기타접대비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관리인력의 축소, 경영합리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원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정부도 각종 규제 및 공과금 부과를 억제하여 기업의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집중에 따라 제조업체의 인력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인력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현재 인문계 위주의 고교교육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술계 중심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자나 여성인력 등의 유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미진학 청소년의 기술교육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원의 확충, 운영을 꾀함으로써 인력난의 해소와 산업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최근 선진국들은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재, 부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신규로 개발된 부품·소재의 기술이전은 기피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기술 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 방안 강화

한국 기술 수준은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공 및 조립 기술에서는 일본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기술분야에는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설계 및 제어 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의 30~40% 정도이다. 그밖에도 기초 기반 기술, 특수 핵심 가공 기술이 취약하여 국산품 개발 시에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²²⁾

<표 14> 한·일간 일반기계산업의 기술수준 비교(일본=100)

부분	한국
-설 계 기 술	33-44
-주 단 조 기 술	67
-열 처 리 기 술	64
-표 면 처 리 기 술	50
-금 형 기 술	74
-유 공 압 기 술	40
-제 어 기 술	50
-조립 / 가공기술	80-90

자료: 산업은행(1999),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p 21

특히, 최근 선진국들이 고급 핵심기술의 이전을 피하고 있으며²³⁾, 또한 기술 의존에 대한 높은 성향이 한국의 산업 구조를 대일 수입 유발적으로 굳히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도입된 기술이 어느 정도의 단계를 지나면 이를 소화, 응용한 독창적인 자체기술 개발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진국 특히, 일본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았던 것이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고수입 유발적이고 저부가가치 유발적이다. 이러한

22) 2001년 5월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부품, 소재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기계 부품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산업 연구원 「기계류, 부품산업의 국산화 실태분석 및 촉진 방안」, 1992. p97

산업구조는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기술수준이 일본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심할수록 대일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에 매우 중요한 자본재나 중간재의 대일 의존이 매우 심각했다. 경제자립과 선진국 진입은 기술자립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계획이 수립된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자동차, 산업계, 전기기계 및 전자부품 등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플랜트류와 기술용역, 반도체, 컴퓨터 등 고도 기술 집약적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정부는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서 산업 전반의 국산화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식하였다. 1986년부터 우리 정부는 국산화 대상품목을 선정, 고시하고 금융, 세제 등 종합적 국산화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²⁴⁾

제1차 국산화 추진기간인 1986-1991년간 총 4,542개 품목을 국산화 대상으로 고시하여 2,212개 품목이 개발 완료되었다. 품목별로 국산화 성공률을 보면 자동차 부품이 61.6%로 가장 높고 일반 기계 및 동 부품이 40.4%로 가장 낮았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1991년간 국산화에 따른 국제수지 효과가 수입대체에 44억 달러, 수출대체에 26억 달러로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산품이 개발되면 기존의 對韓 수출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덤핑 등 약탈적 가격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제품의 자생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기술 개발과 선진 기술도입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도입된 선진기술을 수용하여 국내 생산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기술을 수용하고 소화하는 정책을 국

24) 이인호 「한국의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2.6 p61

내에 확산하는 것이 신제품과 신기술의 자체개발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높아진 국내기술 수준에 의해서 국내 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5> 1986-1991년간 국산화에 따른 부문별 교역개선 효과

(단위: 백만 달러)

	수입대체	수출대체	합계	비중
일반기계 및 동부품	1,527	1,034	2,561	36.7
자동차 부품	782	208	990	14.2
조선기자재	162	58	220	3.2
전기·전자	962	879	1,841	26.4
소재	960	401	1,361	19.5
합계	4,393	2,580	6,973	100.0

자료:한국 무역협회, 「수출입동향」, 각년도

3. 수출상품의 고급화·다양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가는 세계일류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R&D·디자인 혁신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반도체, 휴대폰, 승용차, 에어컨 등 55개 품목을 차세대 일류품목 PDP, 리튬전지 등을 65개 이미 선정하여 매년 100개씩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²⁵⁾

대일역조 심화현상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품·소재 분야를 수출핵심 분야로 집중 육성하여, 부품·소재 수출비중을 4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계부품의 자동화, 국산화 등을 위해서 부품·소재 전문 벤처 기업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부품·소재 수출 선도기업(Leading Company)를 선정하여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25) 이병호 「우리 무역의 현황과 대책」 산업자원부 2001.11.6 p11

4.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 관련 기술력을 제고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표 16>일본시장에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경쟁력 변화 유형	산 업 분 류	한국의 대일 무역 특화지수	
		1994/95	1999/2000
경쟁력 강화	석 유 제 품	0.17	0.81
	컴 퓨 터	-0.55	0.37
	피 혁 제 품	-0.35	-0.06
	플라스틱 제품	-0.25	-0.11
	가 전	-0.48	-0.37
	자 동 차	-0.79	-0.58
	화 학 제 품	-0.66	-0.64
	기 계 류	-0.87	-0.70
	정 밀 기 기	-0.87	-0.81
경쟁력 약화	기 타 제 조 업	0.67	0.47
	섬 유 류	0.54	0.48
	조 선	-0.89	-0.93
	통 신 기 기	-0.13	-0.43
	진 자 부 품	-0.29	-0.37
	반 도 체	-0.11	-0.26
	철 강 제 품	-0.11	-0.25
제 조 업	-0.36	-0.26	

자료: 신현수·이원복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3 P46

주: 1994/1995년의 무역 특화 지수²⁶⁾는 1994년과 1995년 무역 특화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구하였으며, 2개년 평균치를 사용하여 무역 특화지수를 구한 것은 경기 변동이나 수입규제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수출입 변동이 야기할 수 있는 통계상의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서임

26)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는 특정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대일 무역 역조의 심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기계, 부품 소재 등의 제조업 분야이다. 실제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경제위기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벗어나는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제조업이 튼튼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제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일 무역 역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대일 무역 역조 개선에 최우선 해결과제이다.

<표 16>에서 보듯이, 1999/2000년 현재 한국은 석유제품(0.81), 섬유류(0.48), 기타제조업(0.47), 컴퓨터(0.37)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본에 비해 수입특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일본시장에서의 대일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수입특화의 정도가 특히 큰 산업은 조선(-0.93), 정밀기기(-0.81), 기계류(-0.70), 화학제품(0.64), 자동차(-0.58), 통신기기(-0.43), 가전 및 전자부품(-0.37)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이 일본에 대해 대체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으나 동태적으로 보면, 제조업 전체의 무역 특화지수가 1994/1995 -0.36에서 1999/2000년 0.26으로 상승하여 대일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일 무역 역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일 무역 역조와 관련이 있는 기계, 부품 관련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5.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 정책

1960년대에 들어서 우리정부는 정부주도하에 선건설·후분배 정책을 내세워 단순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적극적 해외 자본,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협소한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수출하는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실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업국이 되었다. 구조면에서 의류공업보다는 섬유공업, 음식공업보다는 식품공업, 인쇄공업보다는 제지공업, 기계공업보다는 소재형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자원과 자본, 그리

고 기술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공해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즉, 우리는 다소비적인 소재형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소재형 산업은 자원의 부족과 기술혁신의 週期論上 필연적으로 한계산업과 한계상품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산업구조를 점차 개편하여 고도화하고 건설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순 설비확장을 통한 양적 확대와는 달리 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조정이 우리 나라 경제에 필요하다. 즉,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한 단계 높은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가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요건이 된다.

무역불균형 개선과 산업기술이전 문제는 동시해결이 어렵다. 이는 산업기술이전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현장 개선·개량 노력이 체화된 기구류·부품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對韓 투자업체가 제3국 진출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아, 과거와 같은 자국 수입·3국 수출에 의한 대일역조·전체수지개선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17> GDP대비 연구개발비 (%)

	1993	1995	1998
한국	2.08	2.68	2.52
일본	3.00	2.84	2.98
중국	0.62	0.49	0.69
대만	1.78	1.81	1.98

자료: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IMD)

박순찬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원인 분석」 산업자원부.2002.10 p17

<표 18> 1인당 연구 개발투자금액(US\$)

	1993	1995	1998
한국	144.9	272.6	174.8
일본	881.4	1061.6	978
중국	2.8	2.8	5.3
대만	179.4	222.7	243

자료: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IMD)

박순찬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원인 분석」 산업자원부.2002.10 p17

<표 19> 보유중인 특허권수(인구 10만명 당)

	한국	일본	대만	중국
1990	58	477	62	-
1997	163	690	686.8	1.6

자료: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IMD)

박순찬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원인 분석」 산업자원부.2002.10 p17

우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 기술 및 지식자본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볼 때, R&D투자를 비롯한 기술개발 능력은 해당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17>과 <표 18>과 <표 19>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R&D투자는 일본보다는 낮고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 중국, 대만의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R&D투자는 1998년 2.52%로 199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1998년 기준 1인당 R&D투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연구개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의 1인당 R&D투자는 174\$로 일본의 978\$, 대만의 2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발전은 1980년대까지 주로 조립형 산업기술의 고도화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계산업부문에서 조립형 산업 기술의 급속한 진보가 있었으며, 전기·전자 산업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가격체계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어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조립형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의한 산업의 성장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조립형 산업기술의 경우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벌써 대부분의 관련 제품에서 국제 경쟁력의 역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공형 산업기술의 고도화」가 절실한 실정이며 아울러 조립형 산업기술을 점차 가공형 산업기술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기술 고도화가 이른바 「총체적 기술의 고도화」로 추진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기술의 자체 개발과 해외 기술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17>과 <표 18>과 <표 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 투자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정부도 외형성장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열악한 기술 투자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저부가가치의 기술보다는 <표 20>의 일본 기술 현황을 참고하여 한국도 기술력을 제고시켜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가 극히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일본의 정책이나 연구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여 우리에게도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0> 21세기 일본이 버릴 기술과 살릴 기술

	버릴 기술	살릴 기술
비철금속	중저압 전력용 전선	고기능 광섬유
자동차	연료분사형장치 등 디젤 관련	하이브리드 기술, 차체경량화
섬유	범용품의 방적사	특화 원면사용 방적사
소형재	단순한 금형	초정밀 금형
철강	범용품종의 생산기술	고품질 재료, 고급철강
화학	로테크의 석유화학 제품	액정 편광막, 고흡수성 수지 등
산업기계	로봇의 범용기술	로봇의 코어 기술
항공우주	종래의 판금구조 설계	복합재구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제지펄프	범용품종의 제조기술	경량화신문지 등 고품질 제조기술
정보통신	브라운관 TV	동화처리IC, 플랫패널 등

자료: 김현진 「일본기업 재도약의 가능성」 삼성경제 연구소, 2003.4 p20

제 2 절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 불안요인의 적극적 해소

대일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중첩되는 경제 불안요인들이 복합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북핵, SARS, 가계부채 등 기존 불안 요인외에 물류대란 같은 최근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악순환을 조기에 막고 경제심리를 안정시켜, 대내외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 대비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안 요인 돌출도 문제지만, 정부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여 누적 및 중첩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정부가 국정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보여 주어 불안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는 눈앞에 닥쳐 있는 현안들을 최우선 처리하면서 동북아 중심, 행정수도 이전 등 새롭고 장기적인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근거 없는 낙관이나 과도한 비관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자신감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대외 통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특히 근거리에는 일본과의 무역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간의 무역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것만이 무역 역조 개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과거 모순의 누적,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으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물류 경쟁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사전 대화, 사후 엄정 대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소수집단의 행동이 국가공동체 전체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대화·토론으로 해결할 사안과 결단·행동에 나서야 할 사안을 구분해서 원칙을 지키고 근본적 해결을 추구해야만 문제의 재발방지가 가능하고, 노사화합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불법 분규로 부도가 난다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²⁷⁾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지속에도 유효하다.

2. 시스템 혁신으로 국가 전반을 업그레이드

경제불안이 계속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경직적이며 지향하는 방향이 불분명한 <시스템의 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정부개입, 관치금융이 유지되고 있고 회계투명성 등은 미국식 스탠더드가 도입되어 있으며, 지역 균형이나 소득분배등 복지국가 모델이 혼재된 상태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압축성장기의 시스템(正), 외환위기로 긴급 수혈된 시스템(反)을 넘어, 우리에게 적합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시장경제, 능력위주, 격차 인정을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빈곤계층과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으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시스템 개혁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

27) 전영재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과정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 2003.5 p36

리고 정부는 경제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감축, 부동산시장 안정, 노사화합 등은 손실 분담, 주택시장 투명성,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개방, 경쟁을 통해 각 주체들이 시스템 혁신에 나서도록 자극한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행정, 교육 부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줄이는 대신 탁월한 개선과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3. 무역 인프라 구축

수출경쟁력은 기업의 노력과 함께 산업무역 기반이 충실해져야 높아진다. 정부의 특정 산업 지원이나 직접 관여의 유효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인프라 조성이 수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의 피해를 이유로 직접 지원을 문세삼고 있어 정책방향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무역 인프라는 기업의 수용에 맞추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출 증대는 국가 전반의 '수출하려는 의지'와 관련되는 장기 과제이다. 통치자나 일반인의 수출에 대한 인식, 수출업체가 처한 경제·사회 여건 등도 광의의 무역인프라에 포함된다. 국정과제 중 수출의 우선 순위를 높이고 출입국 규제완화 등 전반적 국가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E-Trade) 확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무역자동화 체제 확산을 통해 기업의 무역 부대 비용을 절감하고, 인터넷 수출마케팅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무역전시실을 확충하고 전시회 수준의 질적 제고와 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 구축도 요구되며, 해외 시장의 개척 거점의 재구축을 통한 잠재성장시장의 발굴도 시급하다. 정부는 이러한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대일 수출 마케팅 활동 강화

일본 상거래 관행의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의 유대, 개인적 신뢰관계, 오랜 인간관계, 정착된 상호 신뢰관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거래 관행은 우리 나라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관계 구축은 일본 특유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진입장벽 중의 하나이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보다 거래당사자간의 신뢰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인적교류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거래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제품 고장이나 클레임 발생 시 신속한 사후처리가 수반되는 서비스를 확실하게 한다는 신뢰감을 상대에게 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가격을 일시에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등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마인드도 필요하다. 외국인의 일본시장에 거대한 진입장벽이었던 일본의 유통구조는 개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Internet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가면서 폐쇄적 유통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까지의 수출을 위해 일본 무역관계자에게만 힘써왔던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일본의 소비자의 의식구조, 소비경향, 소비패턴 등 시장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매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소비자가 우리 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활동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고품질·고품격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 수입국 소비자 소비경향 및 특성, 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일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출혈수출을 마다하고 일본시장을 개척하려 했던 전자제품의 참패를 거울삼아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일 시장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독일, 대만 등이 구조적으로 무역흑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탄탄한 기업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기업, 그 중에서도 종합상사가 수출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대기업들도 소규모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출전선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프로그램 운영, 무역회사 신설 지원, 해외시장을 전제로 한 기술개발과 벤처창업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제 3 절 엔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적응력 강화

우리나라는 일본 엔화의 변동에 취약한 수출상품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수출품의 거의 절반이 일본 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하여 반도체, 철강, 조선,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은 대부분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경합품목 수출면에서도 엔화 환율 변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일경합 품목 수출성과 지수(한국 수출액/일본 수출액)는 지난1993년 20.5%에서 1997년 34.1%로 13.6% 포인트가 향상되었다.²⁸⁾ 이중 엔화 강세 2년간의 개선폭은 9.7%포인트인 반면, 엔화 약세기의 개선폭은 3.9%포인트에 그침으로써 대일 수출경쟁에 있어 엔화환율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엔화 강세가 진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원/100엔 환율의 상승으로 일본에 비해 한국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효과로 분석된다. 또한 수입금액은 원/100엔 환율의 상승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는데 수출금액 증가율보다는 낮아져 상품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엔화 강세는 우리의 수출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28) 이기호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수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0.8p54

준다고 볼 수 있다. 엔화강세가 세계 경기의 회복세와 맞물릴 경우 그 부수적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경우는 원가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지역에서 일본이 아닌 제3국과 경쟁하거나 수입국 상품과 경쟁하는 경우는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엔화 강세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시급히 가격경쟁력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외환제도도 원·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하부기능을 확충하여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환율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의 경우 엔화강세가 나타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되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엔화강세가 나타나면 국내 기업들은 엔화강세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엔화 강세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반면에 엔화 약세도 한국의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이는 엔/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오고 엔/달러 환율의 상승(엔화 약세)은 우리 나라의 수출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친다. 엔화 약세시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의 대일 수출 및 대 세계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수출둔화에 따른 국내 성장 둔화 및 원화의 동반 약세로 총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엔화 약세가 우리 나라 수입 감소보다 수출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적으로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엔화 약세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엔화 약세시 원화도 절하되느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대체로 원화는 엔화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의 분기별 거시경제 모형에 의할 경우, 엔/달러 환율의 1% 상승은 원/달러 환율을 0.32% 상승시키며, 수출금액을 0.22% 감소, 수입금액을 0.1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⁹⁾

산업별로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의 경우는 수출이 0.29%감소하는 반면, 비 ICT산업의 경우에는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엔화 약세는 일본제품과의 경합이 더 치열한 ICT산업 수출에 영향이 더 크다.

엔화절하가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경합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조선, 고무·플라스틱, 철강, 금속제품, 기계류, 수송장비 등에서 비교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섬유류, 나무제품, 모피·가죽, 제지·인쇄 등 경공업제품과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 철강 등에 있어서 일본 기업의 경영 악화로 우리나라 수출가격 인하 여력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 가전, 자동차 산업 등의 해외 생산확대와 일본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부문 철수, 국내 기업의 IT관련 고부가제품 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구조면에서의 대일 경쟁관계도 과거보다는 약화되었다.

엔화 약세에 따른 대비방안으로는 먼저, 정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고 위축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북돋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들은 환율의 빈번한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쟁력 요인의 저하현상에 대한 면역체질을 굳혀 나가야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제품가격의 인하보다는 품질, 디자인등 비가격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산업의 경우 공급과잉상태에 있으므로 업계의 협력과 제휴를 통한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채산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조선 등 조립산업의 경우 생산성제고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품질, 기술 등 비가격 경쟁력을 시급히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9) 신현수,사공 목, 황윤진 「일본의 장기불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2.4. .P68

제 4 절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확대

1. 한·일 FTA 추진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인접한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는 물론, 지역주의에 참여 자체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FTA는 다른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도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문제와 심화되는 의존도, 경제적 격차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과거 역사와 관련된 문제, 독도 분쟁,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구도와 같은 정치·사회적 현안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양국간 무역자유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한·일 FTA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한·일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높은 일본 상품이 한국의 산업기반을 뒤흔들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낮으며,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2-3%에 지나지 않으나 한국은 7-8%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³⁰⁾

그러나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의 기업들은 주력산업에 중복 투자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았다. 산업의 중복과 과잉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업계간 협력을 요청해왔으나

30)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12. P100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FTA하에서 보호장벽이 철폐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기업들은 생존차원에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중복투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장기적이며, 동태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대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일 FTA는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FTA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동북아와 동아시아는 EU 또는 NAFTA와 같은 지역적 경제블록이 형성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세계경제의 3대 축의 하나인 동아시아가 북미지역과 유럽에 비해 경제협력의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이 지역 국가들은 경제협력을 서둘러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사회적인 장애요인도 있지만, 지역적 인접성, 경제적 긴밀도 등으로 볼 때, 동아시아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동아시아 FTA에서 한국과 일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는, 동아시아 전체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단일시장이 됨으로써, 역내기업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새로이 창출된 대규모 시장의 진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됨으로써 고용이 확대되고 더불어 기술이전이 촉진되는 동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 한·일 FTA에서 양국 기업들이 채택한 생산기술, 제품규격,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을 동아시아 국가로 확산·정착시킴으로써 아시아적 표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이 미국, EU 등 구미의 표준과 상치될 경우에도 국제적 표준에 관한 협상에서 지역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종합1)

(단위: %포인트, 억 달러)

	2000년도 연구(관세 +FDI) ²⁾	GTAP 파라미터				GTAP+한국적 파라미터			
		규모불변		규모의 경제		규모불변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지표/시나리오		GCS	GCL	GSS	GSL	KCS	KCL	KSS	KSL
GDP	2.81	0.32	1.10	0.43	3.91	0.30	1.42	0.42	3.58
후생수준	11.24	1.22	0.75	1.07	2.89	1.23	1.58	1.13	2.78
등가변환	454.99	4.80	2.93	4.14	11.16	4.86	6.19	4.24	10.38
대일본 무역수지	-41	50	64	73	83	66	76	92	98
대세계 무역수지	4,66	-1.62	11.38	-1.55	21.77	-1.85	7.78	-1.39	6.72

주: 1)물량변동 기준 변동액임

2)관세철폐³¹⁾와 투자유입 효과를 합친 효과임

자료: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12. p96인용

2. APEC내의 협력 확대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경제 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동아시아와 북미를 통합하는 경제권으로서 한국의 경제상황에 유리한 지역협력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APEC은 한국으로 하여금 21세기 아·태 시대의 주역의 하나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또한 외교의 행동반경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국가로서 국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발판을

31) 관세철폐로는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되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를 상쇄할 만큼 큰 폭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규모는 50~83억 달러가 될 전망이며, 한국적 파라미터에서는 이보다 더 큰 66~9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적 파라미터에서 무역수지가 더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입품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료: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12. p96인용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활동의 국제화와 무역확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 전략 추진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APEC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불안정, EU의 통합, NAFTA의 형성 등 지역주의 추세에 따른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최선의 보장정책(insurance policy)이다. APEC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시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APEC이 교역규모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상마찰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다자적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APEC이 선진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또는 양자주의(bilateralism)적 통상압력을 완화시키는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PEC의 발전은 다자주의 질서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은 APEC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역내 무역자유화의 추진에서는 OECD 가입, 미국과의 정책대화 결과 이행, 여타 회원국과의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현재 폐쇄적인 일본 및 ASEAN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으로의 진출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내에서 한·일간은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포용하고 역외의 블록화 추세를 견제하고, 세계경제를 자유로운 다자간 관계로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APEC을 통해 일본과의 역내관계임을 부각시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구하여야 한다. APEC 내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한·일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상호 교역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측에서 일본에 대하여 경제대국에 걸맞는 교역확대에 대한 기여를 유도해야 한다.

3. 교역확대와 기술협력 촉진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대시장을 활용하여 교역확대와 상호 투자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시장은 그 규모가 크거니와 금후 급속하게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될 것이므로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도 교역의 규모가 확대되어 1999년에 교역 규모가 세계 11위에 달할 뿐 아니라, 내수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투자재·중간재의 주요 수출시장이 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이 수행해 온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요 흡수자 기능을 대신하여, 한국과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수입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평균 관세율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는 섬유제품, 신발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쿼터, 관세쿼터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對韓투자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본이 제조업 중심의 對韓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대한기술이전과 기술협력의 확대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수요증대로 인해 화학, 전기·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은 단순하고 소규모의 저급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대입수입 유발적인 기술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일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동아시아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술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역내에서 경제대국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동아시아의 관내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 5 절 기타 대책 방안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책

(1) 관세장벽의 대응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일 의존이 강한 기계류, 부품, 소재 등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산업 구조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임금 안정,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현재의 수출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수출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출통관은 세관통제를 거의 생략하고 수입통관은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수단만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출 촉진 차원에서 수출물품 제조 전에 수출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면 통관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500 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³²⁾

그리고 일본의 관세율 구조는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부문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농수산물, 피혁, 신발, 섬유류 등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지닌 부문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기적인 이러한 품목의 관세율 인하 요구가 대일 수출증대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2) 비관세 장벽의 대응

가. 일본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책

첫째, 대일 통상정책을 강화하여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32) 산업자원부 「일본시장 진출의 길」 2000.1 p24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일본은 이제까지 자국의 농수산업이나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수입억제효과가 큰 수입수량제한에 대해 국내의 생산부진으로 인해 쿼터량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산물 등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쿼터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³⁾

나. 일본정부의 대일 활동 개입에 대한 대응

일본의 국영무역, 행정지도, 정부조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의 운용방법 및 정부조달 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정기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우리쪽에서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의 일본 시장에 대한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연구기관, 유관단체들의 일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기능을 높이도록 한다. 개별기업들도 이와 같은 노력을 알차게 전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업, 기관 등이 수집한 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실질적인 대일 수출상품을 육성·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³⁴⁾

다. 기준 인증제도에서 대응

일본의 기준, 인증제도가 수입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기준, 인증제도를 획득치 못하였을 때에는 수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본의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등 비관세 장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의 까다로운 검사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 위생

33) 이인호의 상계 논문 p 67

34) 산업 연구원 「선진국 비관세 장벽과 우리의 대응」 1992. p135-137

및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규격 기준을 도입토록 하고 이를 위해 외국과 공동전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검사 절차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검사 및 증명 결과를 받아들이고 검사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까다로운 기준, 인증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의 기준, 인증 마크로서 보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일본의 마크 획득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매우 복잡한 수입절차제도와 까다로운 보건 및 안전 규정은 대일 수출을 지연, 억제시키고 수출업체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세장벽의 개선을 위해서 시장개방 문제 애로처리 본부(OTO)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³⁵⁾

2. 문화상품 등의 수출 확대방안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은 삶의 질에 대한 추구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높은 부가가치 때문에 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에 급격한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화산업이 산업으로서의 역사가 짧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미미한 실정으로 객관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문화 상품과 연계한 상품개발과 대일수출 노력이 미흡하다. 일본인들은 여행시 여행지와 관련된 선물을 구입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서 선물용으로 살만한 문화와 관련된 선물용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이 문화 상품과 연계한 상품개발과 수출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캐릭터 산업을 들 수 있으나 한국은 아직 캐릭터 상품개발노력이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상품시장은 넓게 보아 이에 관계되는 여가시장(스포츠, 취미 및 창작, 오락, 관광 등)은 약 80조 엔

35) 朴哲洙 「韓國·日本の經濟關係とその構造」 熊本商大論集. 1993. p 75

으로 국민 총지출의 16%, 민간 최종소비 지출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³⁶⁾일본에서는 협의의 문화산업의 일부인 게임산업, 영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음반산업, 출판, 신문, 방송 등 멀티미디어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철저하게 문화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방송되면 바로 관련 캐릭터 상품이 판매된다. 일본인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캐릭터 상품에 열광하고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문화상품 전문체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의 관광지 어디를 가도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토산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아 우리 문화와 연계한 상품도 일본시장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문화상품이 수출상품화 되기 위해서는 문화상품이 국가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 파워 구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수출상품화만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

3. 일본 유통업체와의 제휴

일본의 복잡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유통구조, 유통관행, 유통제도적 장애들을 극복하고 대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유통시장에의 진출 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은 과거 종합 상사, 수입 총대리점 등이 수입을 거의 독점해 왔으나 일본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 및 수입확대 정책 등으로 중소 무역업체, 도매상, 백화점 등을 통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수출촉진단 등을 통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전람회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신규 바이어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망된다.

둘째, 최근 일본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소비패턴도 다양

36) 이인호의 상계 논문 p 89

화,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수출업체들이 일본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본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수출업체들은 시장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부합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판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NICs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업계공동의 홍보 및 광고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일본의 광고, 홍보모체와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주시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일본 소비자를 안정된 고객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의 수입 총대리점을 통한 수입행위가 완화되면 수입 총대리점을 경유하지 않는 수입이나 개별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복잡한 일본의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개발수입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본 유통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 상품의 전문 판매 코너를 설치하는 등 우리 상품의 취급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마케팅 능력이 우수한 전문판매요원을 육성해야 한다. 종합상사 등의 일본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가급적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업계의 전문판매요원이 귀국후에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는 일본 시장에 대한 정보의 축적과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시장 전문요원 양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통제휴를 통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본 유통업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메이커, 생산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품 기획, 디자인, 제조, 포장, 납기 등 상품의 전 과정에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상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여 상품기획,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상품에 대한 명확한 컨셉설정과 함께 공략대상을 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4.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시장개척

일본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650억엔(1999년 기준)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31,600억엔(통산성, 엔더슨 컨설팅 공동조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주요 대상으로는 여행(5.8%), 자동차(7.6%), PC(17.6%), 서비스(8.9%), 의류 약세서리(1.0%), 취미, 잡화, 가구(3.8%), 서적CD(3.5%), 선물용품(3.0%) 등이다. 37)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보다 규모가 크고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시장 점유율 확대와 경쟁력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취급품목이 표준적인 제품일 경우 성공적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공유는 E-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일본의 유통 장벽을 극복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전자 상거래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의 유통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일본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국경 없는 대륙이라는 인터넷 시대에 과거처럼 인위적인 장벽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일본시장 확대는 폐쇄적인 일본 유통망을 개척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유망한 수단이 될 것이다.

37) 한국전자거래 진흥원 「일본전자 상거래 동향 및 전망」 2000.9

제 V 장 결 론

한국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 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왔다. 사실상 대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시장은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소비자의 요구도 까다로워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대일 수입의존적 산업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대일 수입 때문에, 우리의 대일무역 적자는 근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시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극심한 무역 불균형은 한·일 통상 마찰은 물론 국가간의 생산적인 교류관계의 진전과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정부간에 적절한 개입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정책협력을 시도하여 국민소득상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국민 소득상의 손실 때문에 한국과의 정책협력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일본의 무역수지도 흑자를 계속하고 있어 일본의 대외 무역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선진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환경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에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도모하며 나아가 값싼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의 물가대책과 소비자 이익의 증진을 추구하여야 한다.

대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무역구조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엔화의 변동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채산성이 악화

되거나 수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기술력 향상을 통해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 개발하여 대일 의존적인 산업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인터넷 판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보수적인 유통구조가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일본시장의 유통구조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넷째, 각국의 대일 수출상품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시장개방이 무분별한 수입을 초래하여 무역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 국민의식개선에 또한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타 대응방안으로는 한일 FTA체결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 제고가 있고, 대일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율 인하와 통상 교섭의 노력 등이 요구된다. 또 전자상거래는 일본의 유통장벽을 효과적으로 뛰어 넘어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일무역 역조의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과의 장기적 협력을 추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대일무역 역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일 역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문헌

1. 강인수, 김태준, 박태호, 유재원, 유진수, 이호생, 채욱, 한홍렬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1년 8월.
2. 마이클 포터 저, 신동욱 옮김, 「일본 경제 위기 보고서(Can Japna Compete?)」, 세종연구원, 2001년 5월.
3. 「경제동향 Brief 제 333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9월.
4.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2003년 4월.
5. 이기호, 「우리 나라 대일 무역 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2000년 8월.
6. 「최근 대일 교역 패턴의 변화 및 일본시장내 우리 수출의 경쟁관계 분석」 산업자원부, 2003년 7월.
7. 이우광,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삼성경제 연구소, 2001년 3월.
8. 송재열, 「대일 무역 역조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세계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논문. 1996년 8월.
9.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년 12월.
10. 김양희·조병택,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02년 12월.
11. 신현수, 사공목, 황윤진 「일본의 장기 불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2년 4월.
12.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 비교」 산업자원부, 2001년.
13. 김현진, 「일본 기업 제도약의 가능성」 삼성경제 연구소, 2003년 4월.
14. 전영재,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과정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5월.

15. 한국무역협회, 월간 무역 「무역 통계」, 2000년 2월
16. 「대일무역 적자의 확대요인과 전망」 재정금융사, 1992.7
17. 「일본경제사회의 진화와 한·일 교역」 한국개발 연구원, 1988.
18. 「기계류, 부품산업의 국산화 실태 분석 및 촉진 방안」, 1992
19. 이인호 「한국의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2.6
20. 이병호 「우리 무역의 현황과 대책」 산업자원부. 2001. 11. 6

A Study on the Several Countermeasures for Korea's Trade Deficit with Japan

Choi, seon-gi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ough the Korean economy has driven an export-centered policy for 40 years, trade deficit has been accumulated to Japan. In fact, we haven't recorded profit when trading with Japan. We have difficulty in advancing in the Japanese market which is the most competitive and most demanding in the world. Furthermore, the problem of Korea's general industrial structure is that it has an import-dependent structure with Japan.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is in the stage of manufacturing major export goods, while Japan has a self-suffici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can produce most of the intermediate goods. Korea's increase of exporting final goods brought about the rapid increase of importing intermediate goods from Japan, showing a high dependence on importing Japanese capital and technology.

The deficit total of the current account can't fundamentally be solved in a short period. Recently, the imbalance of Korea-Japan trade caused not only trade friction but also unstable development in our economic growth, which requires bilateral governments' interference and policy coordination. Owing to the excess importing of Japanese machinery or parts to Korea, the trade conditions with Japan are deteriorating and it enlarges the deficit when trading with Japan.

While Korea want to increase its G.N.P through the policy coordination with Japan, Japan avoids cooperation with Korean due to the its lower G.N.P. As the Japanese economic level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society, Japanese trade balance need to be coordinated. Japan has to make an effort to pay attention to a fair and free trade environment.

Japan should recognize the abolishment of barriers for allowing foreign companies to access to domestic markets would pave the way to removing

friction in trade. Also Japan has to strive for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nd importing cheaper goods and services. We need to survey the reality of trade structures to improve trade balance with Japan. Our technology is strikingly lower than the Japanese. Korea has a structure of importing raw materials from Japan and assembling them then reselling goods to Japan. Japan has conservative habits in trading, such as strict eyes on quality and standard of goods, putting an importance on maintaining long-term business relationships, and strict time limits for delivering goods. So we prepare to avoid influences from the inflation of yen and the price of raw material.

Firstly, improvement of technology can replace the imports from Japan to production itself. Secondly, Koreans have to cope with the Japanese marketing structure promptly as we can see an increase in internet sales. Thirdly, we have to develop high added value goods. We have to participate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area positively. Forthly, Korea has to develop goods which are strongly competitive through precise analysis. Culture-tourism development is also one way to relieve pressures of competition. Lastly, Korean government has to rethink the FTA treaty. Korea needs to negotiate non-tariff barrier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Electronic trade has important means to surpass the barriers to Japan effectively. In addition to this, to overcome present unbalanced condition in trading with Japan, Korea must take effective measures to alleviat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Japan.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a policy toward abolishing regulations to companies and assistant new technology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to strive to reduce trade-deficiency to Japan.

감사의 글

본 논문 지도를 맡아서 정성껏 지도해 주신 김기수 교수님, 이병근 교수님, 최순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싶다.

학부 전공이 본 논문과는 전혀 다른데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지도교수를 선뜻 맡아 주신 김기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싶다.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제 분야의 서적을 공부하고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논문을 열람하면서 보충하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을 느꼈다.

성심껏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정성에서 많은 배움을 받았다. 그리고 경영대학원 4학기라는 짧은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그들에게서 받았던 감화도 내 인생에 커다란 공부였다고 본다. 경영대학원 동료 원우였던 김경조 님, 당석원 님, 전석준 님, 김광수 님, 김철수 님, 서동현 님, 손세정 님, 등등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도 고맙게 생각한다.

내 인생의 커다란 꿈인 큰아들 정엽, 큰딸 서엽, 작은 아들 건엽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쁜 아내 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기회가 닿는다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제통상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오늘따라 부산 영도 앞 푸른 바다의 파도가 눈부시게 푸르다.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 이 논문도 커다란 의미로 다가움을 느낀다.

2004년 2월